

염홍철 前대전시장 중기특위장 '보은 인사' 논란

靑 "정당정치 원리 모르는 소리" 일축

청와대는 20일 정부가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낙선자 위로 성격의 '보은(報恩)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낙선자 등용 배제는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정당이 사람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비서관은 오히려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낙선자 배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답해보기 바란다"면서 "어느 대통령이 인제

등용에서 낙선자 배제 원칙을 적용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다"고 응수했다.

문 비서관은 "선거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선거가 정치인의 무덤이라도 돼야 한다는 뜻인가"라며 "경기에 한번 실패한 선수는 다시 링 위에 오르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면 안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비판을 제대로 하려거든 원내정자가 왜 안된다는 것인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코드라서 안된다거나 낙선자로서 곤란하다는 식의 공허한 논리밖에 제시할 수 없다"며, 공론의 장에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泰 쿠데타 타산지석" 브리핑 물의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사진)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태국의 군부 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태국의 쿠데타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데타의 주요인은 부패한 권력이었다. 취임 초 탁신 태국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나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쿠데타를 초래했고 국민의 지지마저 잃고 말았다"며 "탁신 총리의 통치 스타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브리핑 내용이 전해지자 열린우리당은 즉각 "공당의 대변인 논평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논평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이 태국의 쿠데타에 매우 고무된 것 같은데 외국의 불행한 쿠데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쿠데타 위협을 가하는 공당의 대변인 논평이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5.16부터 5공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정치군인의 개입으로 수십년간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수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옥고를 치렀다"며 "국민의 역사적 아픔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논평할 수 있느냐. 한나라당은 즉각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보훈처, 향군 '정치활동' 여부 법제처에 해석 의뢰

국가보훈처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향군인회의 '정치활동' 논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법령해석팀에 정치활동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며 "유권해석 의뢰와 별도로 현재 내부적으로도 고문번호사를 통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며 "유권해석 의뢰와 별도로 현재 내부적으로도 고문번호사를 통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美·日 추가제재 "동참" 촉구... 中은 "반대" 고수

대북 금융제재 갈등 재연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놓고 국제사회가 또다시 갈등구조를 재연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인 일본과 호주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인 19일을 기해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반면, 중국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춰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미사일 발사와 무관한 추가제재는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말쯤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북핵 제재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견이 심화되고 6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AP 통신은 "일본과 호주의 이번 강경조치는 대북 강압 조치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중국과 서울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의거,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거래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의 대북 금융제재안을 의결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몇몇 서방국들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12개 기업과 개인 1명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섰다

반면 중국 정부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0차 회동에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들은 가급적 6자회담 재개방안에 논의를 집약시켜야 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강은 특히 "기존 6자회담은 대북 금융제재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대북 추가 제재는 대결을 해소하는게 아니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금난새와 시립예술단체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달 말 광주문예회관에서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유라시안 필하모니 공연을 관람했던 사람들은 색다른 풍경을 만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이 끝나고 단원들까지 모두 퇴장했지만 금 지휘자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무대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튀는 행동'으로 유명한 금 지휘자의 '쇼맨십'이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지만 광주 관객들은 감동을 받았다. 한 관객은 "공연도 좋았지만 금 지휘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정말 관객을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 로비, 쉽게 저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주부들을 위해 문화신포니에타 4중주단이 마련한 모닝음악회를 찾은 60여명의 주부 관객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7월에도 모닝음악회를 열었던 4중주단의 관계자는 기회가 되면 문예회관에서 매일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모닝음악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

두가지 풍경을 접하면서 떠오른 건 광주시립예술단체였다.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6개 시립예술단체는 해마다 각 단체별로 10여차례 정기 공연을 갖고 있다. 또 각 학교와 기관을 방문, '찾아가는 연주회'도 열고 있다.

하지만 시립단체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과 호흡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연을 열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고개가 가우해진다.

지난 여름방학 때 지역 청소년들을 발을 동동 굴렀다. 과제 때문에 음악회에 가야했지만 여름에는 대부분의 단체와 개인이 연주회를 열지 않아 공연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향·합창단(8월 16~17일)과 부천시향·합창단(8월13·16·18일)이 저렴한 가격(3천원~5천원)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레퍼토리를 선정, 청소년 음악회를 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예술의 전당과 부천시립단체의 '모닝음악회' 등은 '히트상품'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광주는 최근까지도 '남의 일'로 생각해왔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광주시립단체들도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향은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모임'을 꾸리고 11월부터 매일 한차례 클래식 음악회·연주회를 갖는다. 합창단도 두차례 아침 음악회를 열었다. 물론 이같은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후 관객들이 '생일축하'노래를 불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다. 시민들은 시예술단체를 사랑하고, 시립예술단체는 시민들에게 멋진 공연으로 답하는 예술 향기 가득한 문화도시를 기대한다.

/mekim@kwangju.co.kr

주미대사 BDA 조사 종결 요구설 논란

〈북한 주거래은행〉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식 주미대사의 발언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 등을 놓고 각기 상반된 시각에서 논란을 벌였다.

이 대사는 19일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당시 미국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주거래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즉각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청와대와 주미대사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례적인 혼신을 보이고 있다"면서 "워싱턴 한복판에서 주미대사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느냐"며 이대사의 '실수'쪽에 무게를 두면서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송영석 의원은 "주미대사가 감히 대통령의 발언을 꾸며냈을 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실제로는 이같은 요청을 하고서도 표면적으로는 부인하는 2중 작전을 쓰고 있다"며 청와대의 부인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노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20일 오전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신연상(오른쪽) 통일부 차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는 BDA 조사문제가 거론됐으나 조기 종결 요청은 없었다"며 전날 청와대 발표를 재확인했다.

특위에서는 또 '공통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업 의원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알맹이 없는 겉데기만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라"고 다그쳤다.

답변에 나선 신연상 통일부 차관은 "관

련국들이 직간접적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의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북측도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현상황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 일각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북특사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angun' (창운)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details. Includes a large table of listings and smaller promotional boxes.